Check for updates

사회과학연구 제37권 4호(2026)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 343-362
http://dx.doi.org/10.16881/jss.2026.10.37.4.343

동서 문명 대분기의 재구성: 폭력의 통제와 제도화를 중심으로

이 기 라†

경희대학교

본 연구는 케네스 포메란츠의 '대분기' 개념을 차용하되, 그 분기의 시점과 내용을 재구성한다. 포메란츠와 캘리포니아 학파가 경제적 지표를 중심으로 동서 문명의 대분기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의 사건으로 규정했다면, 본 연구는 "폭력을 어떻게 통제하고 제도화하는가"라는 정치적 차원에서 동서 문명이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국면에서 서로 다른 경로로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두 문명의 지정학적 조건을 넘어, 폭력에 부여한 규범적 위상과 그 제도화 양식에 주목한다. 서유럽은 노르만 팽창, 교황 혁명, 제1차 십자군을 거치며 전사 계층의 폭력을 법적 절차와 종교적 대의 아래 외부로 투사하는 '폭력의 확장적 제도화'를 시작했다. 같은 시기 동아시아 대륙 핵심부의 송 제국은 군사 권력의 억제, 과거제와 문신 관료제의 확립을 통해 폭력을 문민 통제 아래 봉인하는 '폭력의 문민 통제와 내향적 순치'를 제도화했으며, 11세기 후반에 발원한 도학이 13세기에 국가 정통으로 공인되면서 이 제도적 선택을 철학적으로 정당화했다. 이 서로 다른 경로는 이후 국가 역량의 진화 방향을 조건 지었다.

주요어: 대분기, 문명화 과정, 폭력의 통제, 십자군, 문치주의, 성리학

† 단독저자 : 이기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부교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E-mail : leegira@khu.ac.kr
■ 최초투고일 : 2026년 8월 20일 ■ 심사마감일 : 2026년 9월 7일 ■ 게재확정일 : 2026년 10월 15일

1. 서 론

케네스 포메란츠(Pomeranz, 2000)의 <대분기 The Great Divergence>는 현대 경제사 및 세계사 연구에 지대한 반향을 일으키며 서유럽 중심의 역사 서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었다. 더글러스 노스(North, 1990)나 데이비드 랜디스(Landes, 1998)로 대표되는 전통적인 제도주의·문화주의 사관이 서유럽 특유의 합리성, 재산권 보호 제도, 기술적 창의성을 근대 경제 성장의 필수 선행조건으로 상정한 것과 달리, 포메란츠는 1800년 이전까지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서유럽과 동아시아, 특히 중국의 양쯔강 하류 지역)이 시장 발달, 농업 생산성, 자본 축적, 생활 수준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했다. 이른바 캘리포니아 학파의 관점에서 동서 문명의 대분기는 18세기 후반에서 19세기 초 사이에 발생했으며, 그 결정적 요인은 내재적 우월성이 아니라 풍부한 석탄과 아메리카 식민지라는 지리적 행운과 우연, 즉 외생적 변수들의 결합이었다.

그러나 포메란츠의 대분기론은 그 설명력에도 불구하고, 논의의 근거가 경제적 지표와 생태적 조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김두진, 이내영, 2012; 안종석, 2014; Brenner & Isett, 2002). 이후의 거시역사사회학 연구들(Hui, 2005; Rosenthal & Wong, 2011)은 동서양 대분기의 기원을 '다원적 분열'과 '거대 통일 제국'이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전쟁 빈도의 차이에서 찾으려 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설명의 타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지정학적 파편화와 경쟁이라는 변수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파편화는 군사 경쟁이 왜 발생했는가를 설명하지만, 그 경쟁이 왜 외부를 향한 무제한적 팽창의 형태를 취했는지, 반면에 다국 체제였던 송·요·금·서하의 경쟁은 왜 그러한 형태를 취하지 않았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나아가 이 접근은 특정한 제도를 만들고 작동시키는 행위자들의 심층적 사유 구조, 즉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억제한 규범적 동력을 포착하지 못한다.

본 연구는 지정학적 조건 외에 11세기 후반 서유럽의 기독교(교황 혁명과 십자군 신학)와 동아시아의 도학(성리학적 수양론)이 폭력에 부여한 상반된 철학적 위상이 '폭력의 외부 투사'와 '내향적 순치'라는 제도적 진화의 궤적을 지속하게 한 규범적 차원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부의 축적과 분배라는 물질적 토대의 이면에는 국가의 강제력, 권력의 제도화, 그리고 무엇보다 '폭력(violence)을 어떻게 규범화하고 운용할 것인가'라는 심층적인 정치사회적 기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르베르트 엘리아스(Elias, 1939/2000)가 정식화했듯이 폭력의 통제는 문명화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폭력을 통제하고 합리화하는 방식이야말로 국가의 성격과 진화 방향을 규정하는 근본 변수의 하나이다. 필자는 선행 연구(이기라, 2025)에서 서유럽 귀족 전사 에토스가 중세 기독교의 정당화를 거쳐 근대까지 지속되면서 유럽 근대의 극단적 폭력성의 배경이 되었음을 논증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그 논의를 비교문명사의 지평으로 확장하여 동아시아와의 대비를 통해 심화하고자 한다.

폭력의 처리 양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동서 문명의 궤적은 18세기가 아니라 그보다 700여 년 앞선 11세기 무렵부터 근본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다. 본 연구는 포메란츠의 '대분기' 개념을 차용하되, 그 분기가 시작된 구조적 변곡점을 11세기 후반에서 13세기에 이르는 국면으로 제시한다. 이 시기에 유라시아 대륙의 양극단에서 거의 동시적으로 폭력을 다루는 문명의 방향이 결정되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유럽에서는 1066년 노르만 정복, 1075년에 개시된 교황 혁명, 1095년 제1차 십

자군 선포가 이어지면서 무력을 신성한 목적과 법적 절차 아래 포섭하는 '폭력의 확장적 제도화'가 시작되었다(Bartlett, 1993; Berman, 1983). 같은 시기 동아시아의 송(宋) 제국은 오대십국의 전란을 종식한 뒤 군벌 세력을 해체하고, 과거제를 통해 문신 관료제를 확립했으며, 11세기 후반 정호·정이 형제에서 발원한 도학(道學)이 이후 폭력을 억제하는 사상 체계로 성장하면서 '폭력의 문민 통제와 내향적 순치'를 제도적으로뿐 아니라 사상적으로도 체계화해 갔다(Bol, 1992; Kuhn, 2009).[1] 이하에서 '11세기의 분기'라는 표현은 이 국면 전체를 가리키는 축약으로 사용한다.

'분기(divergence)'라는 개념은 논리적으로 그에 선행하는 공통 상태를 전제한다. 9~10세기의 서유럽과 동아시아는 모두 보편 제국의 해체 이후 무인(武人)이 지배하는 폭력의 시대였다. 카롤링거 제국의 해체 이후 서유럽에서는 성주(castellan/châtelain)와 기사들의 사적 폭력이 만연했고, 중국에서는 당 제국의 붕괴와 함께 절도사 군벌들이 왕조를 세우고 무너뜨리는 오대십국의 혼란이 이어졌다. 비교역사사회학은 그동안 동서 분기의 기점을 다양하게 설정해 왔다. 에릭 미란츠(Mielants, 2007)는 중세 도시국가의 자본 축적 논리에서, 빅토리아 허(Hui, 2005), 장로랑 로젠탈과 빈 웡(Rosenthal & Wong, 2011)은 지정학적 파편화의 장기 지속에서, 포메란츠(Pomeranz, 2000)는 18세기 후반의 생태적 우연에서 각각 그 기점을 찾았다. 본 연구가 11세기 후반을 특권화하는 근거는 이 시기가 두 문명이 동일한 문제에 각자의 해답을 제출한 국면이며 그 해답이 이후 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억제하는 논변이 반복적으로 소환한 준거점이 되었다는 데 있다. 반면 더 늦은 시점을 기점으로 삼는 설명들은 그 시점에 이미 존재하던 제도적 자산과 규범적 어휘의 차이를 설명해야 할 변수가 아니라 주어진 조건으로 전제하는 경향이 있다.

초기 조건이 유사한 두 사례에서 경로가 갈라졌다는 사실은 양자의 비교가능성을 높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배경으로, 두 문명을 하나의 인과 모형으로 검증하기보다 동일한 질문을 같은 순서로 제기하고 각각이 도달한 해답을 대조하는 방식을 취한다. 2장과 3장은 각각 다음 세 가지를 묻는다. 폭력을 실제로 담지한 집단은 누구였는가, 폭력의 행사는 지배 자격에 어떤 효과를 가졌는가, 폭력은 어떤 권위에 의해 승인되고 규율되었는가. 이 대조에서 얻어지는 것은 검증된 인과 관계가 아니라, 이후의 장기 지속을 설명할 때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하나의 규범적 조건이다.

분석 단위에 관해서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서유럽'과 '동아시아'는 동질적 행위자가 아니라 규범-제도 복합체를 가리키는 편의적 명칭이다. 서유럽 내부에서 노르만 왕국, 교황청, 프랑스, 잉글랜드, 카스티야, 네덜란드가 걸어온 경로는 서로 달랐고, 동아시아 내부에서도 송·명·청과 고려·조선·일본은 국가 형태와 군사 조직에서 무시할 수 없는 편차를 보였다. 본 연구가 비교하는 것은 개별 정치체들의 총합이 아니라, 각 지역에서 지배 엘리트가 폭력의 정당성을 다툴 때 실제로 동원한 규범적 문법과 그것이 제도화된 형식이다. 그 결과 본 연구의 명제에는 범

1) 13세기 몽골의 유라시아 정복은 양 문명에 공통으로 가해진 외생적 충격이었지만, 폭력에 대한 제도적, 사상적 분기는 그 이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므로 몽골 지배가 끝난 후에 동아시아는 다시 자신의 기존 경로로 복귀했다. 원(元)의 지배가 끝난 뒤 명(明)은 과거제와 주자학적 문치 체제를 즉각 복원하고 강화했지만, 유럽에서 몽골의 충격(1241~1242년 폴란드·헝가리 침공)은 귀족 전사 계급의 지배 구조에 변화를 남기지 않았다.

위 조건(scope condition)이 따른다. 명제가 직접 적용되는 범위는 유럽의 라틴 기독교권, 그리고 과거제, 문신 관료제, 주자학을 공유한 동아시아 대륙 핵심부, 즉 중국과 한반도이다. 일본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변이 사례로서 독립적인 연구를 요한다.

이하의 논의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2장은 11~13세기 서유럽에서 전사 계급의 폭력이 어떤 제도적, 사상적 계기를 거쳐 확장적 조직화로 이어졌는지 살펴본다. 3장은 같은 시기 동아시아에서 폭력이 어떤 제도 설계와 사상 체계를 통해 문민 통제와 내향적 순치로 포섭되었는지를 다룬다. 4장은 이 상반된 폭력 처리 양식이 이후 두 문명의 국가 역량 진화를 어떻게 조건 지었는지 검토한다.

2. 폭력에 대한 기독교의 축성과 확장적 제도화: 서유럽의 경로

11세기 서유럽의 사회적·정치적 역동성은 본질적으로 전사 계층의 폭력이라는 원초적 에너지를 어떻게 통제하고 합리화하며, 마침내 외부를 향해 정당한 형태로 투사할 것인가를 둘러싼 거대한 사회적 전환 과정이었다. 카롤링거 제국 해체 이후 중앙 권력의 공백 속에서 무력은 봉건 영주와 기사 계급의 일상적이고 자의적인 권력 행사 수단이었다(Kaeuper, 1999). 그러나 11세기 후반에 접어들며 노르만의 군사적 팽창, 교황권의 법적·제도적 혁명, 신학적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이 결합하면서, 파괴적이었던 사적 폭력은 법과 종교의 세례를 받고 새로운 문명적 기제로 전환되었다.

11세기 서유럽 폭력성의 가장 역동적인 담지자는 노르만족이었다. 911년 지도자 롤로(Rollo)가 프랑스 북부 센강 하구에 정착한 이래, 호전적인 바이킹의 후예인 이들은 프랑스어와 기독교, 프랑크 봉건제를 수용하면서도 군사적 전문성과 정복욕이라는 전사적 에토스(ethos)를 유지했다. 노르만의 팽창은 잉글랜드(1066)와 스코틀랜드 저지대, 이탈리아 남부와 시칠리아, 나아가 십자군을 통해 시리아·팔레스타인까지 뻗쳤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전사 집단과 개혁적인 교황 권력의 결탁이다. 1053년 치비타테 전투에서 교황 레오 9세를 사로잡기까지 했던 남이탈리아의 노르만 세력은, 불과 6년 뒤인 1059년 멜피 협약을 통해 극적으로 교회의 공인된 '검(劍)'으로 전환된다. 교황 니콜라오 2세가 로베르 기스카르에게 아풀리아·칼라브리아 공작위와 함께 '장차 정복할' 시칠리아에 대한 권리까지 봉토로 서임한 이 협약은, 아직 이슬람 지배하에 있던 영토의 정복을 교회가 사전에 승인하고 축성한 최초의 사례 중 하나였다. 교황은 서임권 투쟁에서 황제에 맞설 물리력이 필요했고, 노르만 전사들은 정복에 신성한 정당성이 필요했다. 이러한 폭력과 신성함의 거래야말로 한 세대 뒤 십자군에서 완성될 결합의 출발점이었다.

조르주 뒤비(Duby, 1977)의 고전적 분석에 따르면, 장자상속제의 확산으로 토지 상속에서 배제된 귀족 가문의 차남 이하 자제들(미혼, 무영지 기사 집단)에게 무력의 행사는 부와 지위, 영지를 획득할 유일한 수단이었고, 이들의 구조적인 토지 추구가 서유럽 전체를 항구적인 폭력 팽창의 압력에 놓이게 했다. 십자군 이전의 초기 기사도는 후대에 낭만화된 고결한 이념이라기보다 전마(war horse)를 소유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직업적 전사' 집단을 가리키는 계층적 지표에 가까웠다. 이 팽창을 추동한 것은 단순한 물욕이 아니라 하나의 완결된 전사적 에토스였다. 중세부터 근대 초까지 이어진 유럽 귀족문화는 남성적 명예의 관념, 전사적 실천과 폭력의 적극적 미화, 그리고 귀족적

결속이라는 세 요소로 구성되어 있었다(Kaeuper, 1999; Mitterauer, 2003/2010). 명예는 전투에서의 용맹과 모욕에 대한 즉각적 보복으로 획득·유지되었고, 전투에서의 잔혹함은 용맹의 증거로, 적에 대한 무자비함은 전사의 고유한 덕목으로 찬양되었다. 요컨대 폭력은 단순히 용인되는 것을 넘어 지배층의 생존 전략이자 계급 정체성 그 자체였으며, 이 에토스는 이후의 문명화 과정에서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은 채 근대까지 지속된다(이기라, 2025).

로버트 바틀렛(Bartlett, 1993)에 따르면, 노르만 정복, 레콘키스타, 동방 식민화(Ostsiedlung) 등 이 전사 귀족과 기사 계급의 정복, 이주, 식민화야말로 950년부터 1350년 사이에 '유럽'이라는 문화적 정체성을 만들어 낸 기본 동력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확립된 정복과 식민화의 제도적 기술은 이후 해외 팽창의 원형이 되었다. 1066년 헤이스팅스 전투 이후 노르만 전사들이 정복지에 성채를 세우고 전례 없는 토지·인구 조사로 수탈을 체계화한 것은 그들의 폭력이 단순한 약탈을 넘어 고도로 조직화된 지배 기술로 진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노르만족이 물리적 폭력의 실질적 담지자였다면, 그 폭력을 규범의 테두리 안으로 편입시켜 '제도적 강제력'으로 전환시킨 주체는 11세기 후반의 로마가톨릭 교회였다. 해럴드 버먼(Berman, 1983)은 1075년부터 1122년(보름스 협약)에 이르는 그레고리오 개혁기를 단순한 종교 개혁이 아닌 '교황 혁명(Papal Revolution)'으로 명명하고, 이 시기를 서구 법률 전통과 근대 국가의 기틀이 형성된 세계사적 분수령으로 규정했다. 또한 로버트 무어(Moore, 2000)는 그레고리오 개혁기를 포함하는 더 긴 기간(970~1215년경)을 사회 조직 원리의 전면적 재편이 일어난 '최초의 유럽 혁명'으로 규정했다.[2] 이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은 교황 그레고리오 7세가 <교황령 Dictatus Papae>(1075)을 통해 세속 군주의 성직자 서임권을 전면 부정하고 영적 권위의 세속 권력에 대한 우위를 천명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발발한 서임권 투쟁(Investiture Controversy)은 유럽을 수십 년간 군사적·이데올로기적 내전 상태로 몰아넣었다. 버먼에 따르면, 이 과정은 광범위한 폭력을 수반한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었으며, 그 결과 교회는 느슨한 영적 공동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입법·사법·행정 체계와 관료제를 갖춘 최초의 '근대적 국가' 형태로 탈바꿈했다. 교황청은 세속 권력과의 투쟁에서 우위를 입증하기 위해 로마법을 부활시키고, 산재한 교령과 교부 문헌을 집대성하여 논리적으로 정합적인 교회법(canon law) 체계를 구축했다. 볼로냐에 최초의 법학 대학이 설립되고, 그라티아누스의 <교령집 Decretum>이 편찬되었으며, 증명 책임의 원칙 등 현대 사법 체계의 근간이 되는 법리들이 정립되었다(Berman, 1983).

그러나 이 법적 합리화가 폭력의 소멸이나 쇠퇴를 의미한 것은 결코 아니었다. 오히려 법은 폭력의 독점적 사용을 정당화하고 지배 구조를 공고히 하는 기제로 작동했다. 그레고리오 개혁파가 세속 군주를 억누르기 위해 고안한 교회법적 논리들은 역설적으로 봉건 영주들이 농민을 영구적인 농노제로 결박하는 법적 근거로 차용되었다. 요컨대 11세기 서유럽의 법 혁명은 사적 원한에 의한 무분별한 폭력을 제한하는 대신, 정당한 권위(교황 또는 국왕)에 의해 승인된 폭력을 합법화하고 사회 통제의 효율적 수단으로 전환하는 '폭

2) 그는 더 나아가 이 혁명이 이단, 유대인, 나병환자 등 내부의 타자에 대한 분류와 배제를 동반했음을 밝힘으로써, 폭력의 외부 투사와 함께 내부 통제 및 규율화가 이 시기 서유럽 제도 혁명의 양면이었다고 주장했다(Moore, 2007).

력의 제도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서구의 법은 폭력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폭력 행사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규정하는 체계로 출발한 것이다. 그리고 교황 자신이 이 체계의 정점에서 폭력의 최종 승인자가 되었다. 레오 9세가 노르만 세력에 맞서 직접 군대를 이끌고 전장에 나섰고(1053년 치비타테 전투), 그레고리오 7세가 '성 베드로의 군대(militia sancti Petri)'라는 관념을 발전시켰다는 사실은, 교황 혁명이 폭력의 부정이 아니라 폭력의 새로운 주권적 배치였음을 보여준다(Cowdrey, 1998).

사법적 체계화가 엘리트 차원의 통제 기제였다면, 사회 저변에서 무장 계급의 폭력을 제어하기 위한 종교적 장치도 등장했다. '신의 평화(Pax Dei)'와 '신의 휴전(Treuga Dei)' 운동이 대표적이다. 989년 샤루 공의회에서 최초로 선포된 신의 평화는 농민, 성직자, 여성 등 비전투원과 교회 재산을 기사들의 무분별한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불가침 선언이었고, 1027년 이후 정립된 신의 휴전은 주일과 사순절 등 특정 시기의 무력 충돌을 금지하는 시간적 통제 조치였다. 그러나 허버트 카우드리(Cowdrey, 1970)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이 운동의 실제 효과와 성격은 양면적이었다. 폭력의 정당한 대상과 시기를 규정하는 조치는 역설적으로 그 외의 대상과 시간에 대한 폭력을 승인하는 효과를 낳았으며, 폭력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폭력의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었다. 기사 계급의 정체성에 뿌리박힌 폭력성을 금지 조항만으로 근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분명해지자, 교회는 억압이라는 소극적 전략 대신 그 파괴적 에너지를 기독교적 대의와 결합하여 유럽 외부로 방출하는 방향 전환을 시도한다. 기독교도 간의 상호 살육을 멈추는 대가로 칼끝을 이교도에게 돌리도록 재설정한 것이다. 이는 폭력의 억제가 아니라 폭력의 재배치(redirection)였다.[3)]

결국 폭력의 외부 투사 논리는 1095년 11월 클레르몽 공의회에서 교황 우르바노 2세의 십자군 선포로 현실화되었다. 비잔티움 황제 알렉시오스 1세의 군사 원조 요청을 우르바노 2세는 기독교 역사상 전례 없는 성전(bellum sacrum) 개념으로 비약시켰다. 카를 에르트만(Erdmann, 1935/1977)의 고전적 연구가 추적한 바와 같이, 이 성전 관념은 돌발적 발명이 아니라 신의 평화, 기사 서임의 축성, 교황기 수여 등 10~11세기에 걸쳐 교회가 전사 계급과 맺어 온 관계가 축적한 제도적 논리의 연장이었다.

십자군 선포가 일으킨 신학적 단절의 크기는 그 직전의 관행과 대비할 때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정당한 전쟁론'은 정당한 권위가 선포한 방어적이고 시정적인 전쟁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지만, 교황이 승인한 '정의로운' 전쟁에서조차 살상은 속죄해야 할 죄악으로 여겨졌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뒤, 우르바노 2세는 십자군을 '참회적 무장 순례(penitential pilgrimage)'로 재정의하면서 이 관계를 역전시켰다. 십자가에 서약하고 예루살렘 원정에서 이교도와 싸우는 폭력 행위 그 자체가 과거의 죄를 씻는 속죄의 수단이자 구원의 통로로 승격된 것이다. 클레르보의 베르나르(Bernard de Clairvaux)가 템플기사단

3) 물론 이 재배치가 서유럽 내부의 평화 지향적 흐름을 완전히 소멸시킨 것은 아니다. 신의 평화 운동, 수도원 개혁 세력의 폭력 비판, 후기 스콜라 자연법학의 전쟁 제한론, 그리고 18세기의 영구평화 구상으로 이어지는 계보는 실재했으며, 유럽의 규범사를 폭력 정당화의 단선적 계보로 환원할 수 없게 만든다. 본 연구가 주장하는 것은 그러한 흐름이 부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경합하는 두 흐름 가운데 제도적 자원과 재정적 뒷받침을 확보한 쪽이 폭력의 조직화 계열이었다는 것이다.

을 위해 1130년경에 쓴 <새로운 기사에 대한 찬미 De Laude Novae Militiae>에서 이교도 살해를 '인간 살해(homicidium)'가 아닌 '악의 살해(malicidium)'로 명명하며 전사자에게 순교자의 지위를 약속한 것은 이러한 전도의 극단적 표현이었다.

더 나아가 이러한 11세기의 신학적 전환은 폭력의 정당화를 넘어, 서구 문명이 폭력을 행사하는 질적 양상 자체를 뒤바꿔 놓았다. 십자군 이전 중세 유럽 내부의 갈등은 기사도라는 규칙과 제약 아래서 싸우는 '정당한 적' 간의 제한적 전쟁에 가까웠다. 그러나 교황권이 이교도와의 전쟁을 신성한 대의로 선포하는 순간, 종교적 타자(이교도)는 타협이나 정치적 협상의 대상이 아닌 지상에서 박멸해야 할 '절대적 적'으로 규정되었다. 적이 단순한 군사적 반대자가 아니라 '절대악'으로 치환될 때, 전쟁은 상대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는 절멸전(war of extermination)의 형태로 나아갈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신학적 전환의 동원력은 즉각적이고 압도적이었다. "신이 원하신다(Deus vult)"는 클레르몽의 함성과 함께, 교회가 수십 년간 '신의 평화'로 억누르려 애썼던 전사 계층의 폭력 에너지는 이제 교회 자신의 깃발 아래 동방으로 뿜어져 나갔다. 조너선 라일리-스미스(Riley-Smith, 1986)는 제1차 십자군 참여자들의 동기가 냉소적 물욕으로 환원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들 다수는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수한 진지한 참회자였으며, 바로 그 진정성이야말로 폭력의 신성화가 지닌 위력을 증명한다. 살상이 구원과 등치되는 순간 폭력은 양심의 통제에서 완전히 해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1099년 제1차 십자군의 예루살렘 함락 당시 자행된 무슬림과 유대인에 대한 무차별적 학살은 우발적 통제력 상실의 결과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교도를 인간의 범주에서 배제하고 절멸시키는 것을 신성한 의무로 정식화한 새로운 폭력 이데올로기의 논리적 귀결이었다.

요컨대 서유럽의 11세기는 단순히 폭력의 통제권을 교황과 세속 군주가 나누어 가진 시기가 아니라, 타자에 대한 무차별적 절멸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규범적 문법이 성립한 결정적 기원이었다. 이후 십자군 이념은 이베리아의 레콘키스타, 발트해 연안의 북방 십자군, 나아가 유럽 내부의 이단(알비 십자군)에까지 무한히 전용할 수 있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만능 문법으로 확립된다(Bartlett, 1993). 다만 11세기의 전환은 일차적으로 제도와 실천의 혁명이었고, 그 법학적, 신학적 체계화는 다음 두 세기에 걸쳐 이루어졌다. 1140년경 그라티아누스의 <교령집>이 전쟁과 폭력에 관한 교회 규범을 집성하고, 13세기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당한 전쟁론'을 스콜라적으로 완성함으로써, 11세기의 실천은 사후적으로 정합적 교리의 지위를 얻었다.

아퀴나스의 '정당한 전쟁론'은 정당한 원인(iusta causa), 올바른 의도(recta intentio), 비례성, 비전투원 보호와 같은 기준을 정교화했고, 실제 분쟁에 적용되기도 했다(Russell, 1975).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이러한 기준의 유무가 아니라 그 배치 방식이다. 서유럽 전통에서 내용적 기준의 충족 여부는 최종적으로 '정당한 권위'의 판정을 통해 확정되었고, 11세기 이후 그 권위의 정점에는 스스로 팽창을 주도했던 교황권이 자리 잡았다. 규범적 기준이 있었지만 그 판정 권한이 폭력의 주체에게 귀속되었기 때문에, 그 기준은 폭력을 제약하는 만큼이나 폭력을 승인하는 자원으로도 기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법체계의 정비와 이데올로기적 신성화가 결합하면서, 서유럽에서 폭력은 억제해야 할 필요악이 아니라 기독교 세계의 확장을 위해 동원되어야 할 성스러운 의무로 격상되었다.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지만, 동아시아에서도 11세기의 제도 혁명에 뒤이은 12~13세

기 사상적 체계화라는 동일한 두 단계 과정이 진행되었다.

3. 유교적 문치주의와 폭력의 도덕적 순치: 동아시아의 경로

서유럽이 기사 계급과 교회의 결합 아래 무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종교적으로 신성화하며 그 창끝을 외부로 겨누고 있을 때, 유라시아 반대편의 송 왕조(960~1279)는 정반대의 길을 향하고 있었다. 당 제국의 멸망(907) 이후 반세기 이상 이어진 오대십국의 분열기는 지방 군벌이었던 절도사(節度使)들의 중앙 통제를 벗어난 군사력과 끊임없는 무력 충돌로 점철된 폭력의 시대였다. 이 참혹한 내전을 종식하고 송을 창건한 태조 조광윤과 그 뒤를 이은 통치 엘리트들은 국가의 영속성을 담보하는 길이 폭력을 극대화하여 외부로 팽창하기보다, 무력 자체를 국가 기구의 그물망 안에 옭아매고 도덕 철학으로 길들이는 데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영민(2021)은 송대 신흥 문신 엘리트의 부상이 절도사들의 무력 지배와 내전이 가져온 파국적 경험에 대한 구조적 대응이었음을 강조한다. 세습 귀족과 군벌이 몰락한 자리를 과거제를 통해 충원된 지식인 엘리트가 대체함으로써, 무력 행사가 아닌 학문과 행정력이 국가 권력의 새로운 중추로 재편된 것이다. 11세기의 송은 무(武)를 문(文)의 통제 아래 종속시키는, 세계사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든 문치주의(文治主義) 체제로 나아갔다.

이 전환의 세계사적 의미는 당송변혁론 논쟁이 잘 보여준다. 나이토 고난은 1922년 논문에서 당과 송 사이에 중국사의 근본적 단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송 이후를 중국의 '근세'로 규정했고, 미야자키 이치사다를 비롯한 교토학파는 이를 유럽 르네상스에 비견되는 '동양적 근세'의 개막으로 정식화했다. 시대구분의 명칭과 세부 동학을 둘러싼 이견에도 불구하고, 당말·오대의 무인 지배와 문벌 귀족제가 해체되고 과거제로 충원되는 문신 사대부가 지배 엘리트의 지위를 차지했으며 무가 문에 제도적, 규범적으로 종속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서유럽에서 폭력 행사 능력이 지배계급의 자격이자 정체성이었던 시기에, 동아시아에서는 폭력이 아니라 학문과 도덕성이 지배계급의 자격이 되는 세계사적으로 새로운 모델이 출현한 것이다.

송나라 문치주의의 시발점은 개국 직후 단행된 군사 권력의 체계적 해체였다. 조광윤 자신이 후주(後周) 금군의 최고 지휘관으로서 군사 쿠데타로 즉위한 무장이었다. 그러나 그는 961년 개국 공신인 고위 지휘관들을 연회에 초대하여 병권의 자진 반납과 부유한 은퇴를 맞바꾸게 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배주석병권(杯酒釋兵權)으로, 이는 무장들에 대한 개별적 숙청이 아니라 오대십국 시기 폭력의 구조적 원인이었던 절도사의 독자적 무장력을 영구히 제거하기 위한 제도 혁신의 신호탄이었다(Kuhn, 2009).[4]

이후 구축된 군사 통제시스템은 폭력의 응집을 원천 차단하는 다중 분산 설계였다. 첫째, 병권의 삼분이다. 군령의 최고 기관인 추밀원(樞密院)은 발병권(發兵權)을 갖되 병력을 직접 지휘하지 못했고, 금군의 지휘 기구인 삼아(三衙)는 병력을

4) 배주석병권 일화 자체는 후대의 기록(司馬光, <涑水記聞>)에 의존한 것이라서 그 사실 여부는 학계의 논쟁 대상이다. 그러나 일화의 사실성과 별개로, 금군 고위 지휘관들의 병권이 태조 건륭(建隆) 연간 초에 체계적으로 회수되고 절도사 체제의 해체가 단계적으로 단행되었다는 것은 제도사적으로 확인된 사실이다(신채식, 2008 참조).

관할하되 이동시킬 권한이 없었으며, 출정 시의 지휘권은 임시로 임명되는 장수에게 위임되었다. 둘째, 경수법(更戍法)에 따라 부대를 수년마다 주둔지를 순환시킴으로써 "병사는 장수를 알지 못하고 장수는 병사를 알지 못하는(兵不識將, 將不識兵)" 상태, 즉 구조적으로 사병화를 어렵게 하는 상태를 만들었다. 셋째, 재정의 분리이다. 군의 예산과 병참은 삼사(三司)가 장악하여 군대의 독자적 자금 조달을 봉쇄했다. 넷째, 지방 차원에서는 문관 지주(知州)의 3년 순환 근무, 황제 직보권을 가진 감찰관 통판(通判)의 견제, 지방 세수를 중앙으로 즉시 이송하는 전운사(轉運使) 체제가 결합하여 지역 군벌의 재정적·인적 기반을 원천 소거했다(신채식, 2008).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조치는 이 통제 기구의 정점에 무관이 아닌 문관을 배치한 것이다. 추밀원의 수장 자리는 북송 중기 이후 과거로 선발한 문신이 대부분이었고, 서하 전선의 최고 지휘조차 범중엄(范仲淹), 한기(韓琦) 같은 문신이 맡았다. 태조가 "재상은 모름지기 독서인을 써야 한다(宰相須用讀書人)"고 천명한 이래, 무관의 지위는 제도적으로 문관 아래 놓이게 되었다.[5] 군대의 인적 구성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송은 대규모 모병제를 시행하되, 기근과 재해로 유민이 된 빈민을 우선 모병함으로써 잠재적 반란 세력을 국가의 급양 체계 안으로 흡수했다. <송사(宋史)> 병지에 따르면, 태조 말 약 37만이던 총병력은 인종 경력 연간(1040년대) 약 126만(금군 약 83만)으로 폭증했는데, 이 거대 상비군은 정복 기구가 아니라 사회 불만 세력을 흡수하는 빈민 구제 제도이자 체제안정 장치의 성격이 강했다(Kuhn, 2009; Lorge, 2005).

군사 권력의 해체가 남긴 공백을 채운 것은 과거제로 충원되는 문신 관료, 즉 사대부(士大夫)였다. 과거제 자체는 수·당대에 기원하지만, 그것이 지배 엘리트 재생산의 중심 통로가 된 것은 송대의 일이다. 존 채피(Chaffee, 1985)의 집계에 따르면, 당대에 연평균 수십 명 수준이던 진사 급제자는 송대에 약 10배 규모로 확대되었고, 태조·태종대에 전시(殿試)가 정례화되면서 관료 충원은 황제가 친림하는 능력주의적 경쟁으로 제도화되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시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교화이다. 답안지의 수험자 이름을 봉하는 호명법(糊名法)과 필적을 감추기 위해 답안을 서리가 옮겨 적게 하는 등록법(謄錄法)의 도입은 혈통, 문벌, 인맥이 아니라 오로지 능력을 심사하는 블라인드 경쟁 장치를 11세기에 이미 완성했음을 보여준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이 경쟁시험에서 어떤 능력을 심사할 것인가이다. 지배 엘리트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무예나 혈통이 아니라 경전 해석과 문장 능력이었다. 피터 볼(Bol, 1992)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송대 사대부들은 스스로 '유교적 문명(斯文)의 담지자'로 자처하며 새로운 집단 정체성을 구성했다. 서유럽 귀족 자제가 검술과 마상창술 연마로 양성되는 동안, 동아시아의 예비 엘리트들은 유학의 경전과 붓을 잡았으며, "훌륭한 쇠는 못이 되지 않고 훌륭한 사람은 병사가 되지 않는다(好鐵不打釘, 好人不當兵)"는 명·청대에 확산한 속언이 요약해 주듯 무예 실력만으로는 더 이상 사회적 위신을 얻을 수 없었다. 조광윤이 구상한 '황제와 사대부의 공치(共治)' 체제는 전사 집단이 정치를 지배하던 시대를 종식시키고, 폭력 자본이 아니라 문화 자본이 통치 엘리트의 자격

5) 태조가 태묘에 세웠다고 전해지는 서약비의 두 번째 조항이 "사대부와 상서(上書)하여 정사를 논하는 자를 죽이지 말라(不得殺士大夫及上書言事人)"였다는 전승(陸游, <避暑漫抄>)은 그 사실성 논란과 별개로, 군주의 폭력으로부터 사(士)의 언론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이 왕조의 창건 원리로 기억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되는 사회를 제도화했다.[6]

이 문민 통제 체제가 왕조 교체를 넘어 명·청과 조선에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서유럽 교회법에 필적하는, 그러나 방향은 정반대인 사상적 기반의 확립이 있었다. 11세기 북송의 사대부들은 불교와 도교의 형이상학에 대응하고 문치 국가의 지배 논리를 정초하기 위해 유교 고전을 철학적으로 재해석한 도학(道學), 곧 정주학(성리학)을 태동시켰다. 북송의 정호·정이 형제가 기틀을 놓고 남송의 주희가 집대성한 이 사상 체계의 핵심 명제는 '성즉리(性卽理)', 곧 인간의 본성이 곧 우주의 이치(<二程遺書> 卷22上)라는 것이다. 인간이 부여받은 본성(性)이 우주 만물을 관통하는 보편적 도덕 원리(理)와 동일하다는 이 전제 위에서, 인간의 탐욕과 그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물리적 폭력은 순수한 천리(天理)가 탁한 기질에 가려져 발생한 인욕(人欲)의 결과물로 규정된다. 따라서 이상적 질서의 구축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라 통치자 자신을 포함한 개개인이 천리를 보존하고 인욕을 제거하는(存天理, 去人欲) 자기수양(修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이 수양론의 실천적 핵심 범주가 경(敬)이다. 정이는 경을 "하나에 집중하여 흐트러지지 않는 것(主一之謂敬, 無適之謂一)"으로 정의하고 "함양은 모름지기 경으로써 하고, 학문의 진전은 앎을 지극히 하는 데 있다(涵養須用敬, 進學則在致知)"고 하여 지속적인 자기 절제와 지적 탐구를 수양의 두 축으로 제시했다(<二程遺書> 卷15; 卷18). 나아가 주희는 경을 "한 마음의 주재이자 만사의 근본(敬者, 一心之主宰, 而萬事之本根也)"으로 격상시켰다(<大學或問> 卷上). 자기수양은 통치(治人)의 절대적 전제이며, 통치의 자격은 혈통도 무력도 아닌 자신의 에고(ego)에 대한 극복, 즉 "자아를 극복하여 예를 회복함(克己復禮)"에서 나온다. 이러한 규범의 구조에서 폭력의 지위는 이미 맹자 이래 왕도(王道)와 패도(覇道)의 구분에 의해 규정되어 있었다. "힘으로 굴복시키는 경우에는 마음으로 복종하지 않는다(以力服人者, 非心服也)"(<孟子> 公孫丑上). 무력에 의한 지배는 덕에 의한 감화가 결여된 상태이며, "전쟁에 능한 자는 극형에 처해야 한다(善戰者服上刑)"(<孟子> 離婁上)는 언명은 전쟁 영웅 숭배에 대한 문명 차원의 거부 선언이었다. 12세기 말에서 13세기에 걸쳐 도학은 이 고전적 규범에 이기론(理氣論)이라는 형이상학적 체계를 부여함으로써, 폭력의 도덕적 종속을 우주론의 수준으로 격상시켰다(김영민, 2021).

일찍이 존 페어뱅크(Fairbank, 1974)는 중국 군사 전통의 특질을 '문의 우위와 무의 종속', 그리고 폭력을 통치의 실패로 간주하는 규범 구조로 요약한 바 있다. 이는 전투의 잔혹함을 용맹의 증거로 찬양한 서유럽 무훈시(chansons de geste)의 세계와 선명한 대조를 이룬다. 서유럽 기독교가 전사의 폭력에 신성한 목적을 부여하여 축성(祝聖)했다면, 성리학은 폭력성으로부터 도덕적 위신을 박탈했다. 물론 성리학이 폭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비폭력 철학은 아니었다. 유교 정치사상에는 정당한 정벌과 토벌, 방어전, 역적에 대한 형벌, 이른바 왕도적 정벌의 논리가 존재한

6) 이 문민 우위 체제가 무(武)를 단순히 방치했다는 뜻은 아니다. 송은 1043년에 무학(武學)을 설치하고(이후 일시 폐지를 거쳐 1072년에 재설치) 1064년에 무거(武擧)를 정례화했으며, 1080년경에는 <무경칠서 武經七書>를 군사 교범으로 간행했다. 군사 지식조차 경전으로 텍스트화되고 시험으로 심사되어 관료제적 절차 안에서만 공인되었다는 것, 즉 무가 문의 형식(경전·시험·관료제) 안에 포섭되었다는 것이야말로 본 연구가 주목하는 지점이다.

다. 성리학은 폭력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폭력을 독립적인 정치적 권위의 원천으로 인정하지 않고 도덕적 규범에 종속시켰다. 그러므로 서유럽과의 차이는 폭력 규범 자체의 유무가 아니라 폭력이 사회적 규범의 위계 안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있다.

시대구분의 정밀성을 위해서도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신유학이 11세기부터 국가 이데올로기의 지위에서 폭력을 봉인한 것은 아니다. 북송대의 도학은 사대부 사회의 소수 학파에 머물렀다. 도학이 국가 정통으로 공인된 것은 1241년의 일이고, 주희의 사서 주석이 과거시험의 표준 교재가 된 것은 원대인 1313년의 일이다. 요컨대 폭력의 제도적 순치는 11세기의 사건이지만, 그 사상적 정당화의 완성은 12~13세기에 걸친 사후적 과정이었다. 이는 11세기 그레고리오 개혁에 뒤이은 12~13세기 그라티아누스와 아퀴나스의 교리적 체계화라는 서유럽의 두 단계 과정과 구조적으로 유사하다.

성즉리 철학은 사대부 지배 체제를 정당화하는 정치 이데올로기이기도 했다. 칼을 쥔 무사 계층은 기질이 혼탁하고 수양이 결여된 자로 폄하되었으며, 최고 권력자인 황제조차 예외로 두지 않았다. 정치는 물리적 강제가 아니라 예법과 군주의 도덕적 감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덕치(德治) 이념 아래, 황제는 경연(經筵)에서 사대부에게 정기적으로 학문을 검증받는 학생이 되었고, 그의 자의적 권력 행사와 성급한 무력 동원은 대간(臺諫)의 간쟁과 유교적 이념에 의해 끊임없이 제지당했다. 경연, 간쟁, 사관(史官) 등 폭력의 최종 보유자를 도덕의 원리 앞에 일상적으로 소환하는 이 제도들은 이후 한반도의 조선에서 극한까지 발전한다.

이러한 폭력의 도덕적 종속과 탈정치화는 대외질서의 구상에서도 관철되었다. 유교적 천하관에서 중화와 이적(夷狄)의 구분은 인종이나 영토가 아니라 예(禮)와 덕의 유무, 곧 문명화의 정도에 따른 구분이었고, 따라서 문명의 타자에 대한 올바른 대응은 정복이 아니라 감화, 즉 "먼 곳의 사람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오게 한다(遠人不服, 則修文德以來之)"(<論語> 季氏)는 것이었다. 정복과 개종을 통해 이교도의 세계를 물리적으로 접수하려 한 '기독교적 보편주의'와, 교화와 자발적 내화(來化)를 통해 주변을 문명의 위계 안에 편입시키려 한 '유교적 보편주의'는, 보편성을 주장하는 방식에서 폭력의 위상을 정반대로 배치했던 것이다. 후일 명·청대 동아시아 핵심부, 곧 예의 질서가 관철된 중화 문명권 내부의 국가 간 관계에서 확인되는 조공 체제의 비팽창적 성격은 이 사상적 기초 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7)]

송대 문치주의의 지정학적 함의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요(遼)와의 '전연의 맹약(1005)'이다. 1004년 요의 대군이 남하하여 수도 개봉을 위협하자, 송은 진종의 친정으로 전선을 교착시킨 뒤 전면전 대신 강화를 선택했다. 매년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의 세폐를 제공하고 양국 군주가 형제 관계를 맺는다는 조건이었다. 이후 1042년의 증폐를 거치면서도 이 체제는 요가 멸망하는 1120년대까지 송·요 간 평화를 유지했다. 전통적 역사서사는 이를 문치주의가 초래한 군사적 나약함으로 인한 굴욕으로 기록해 왔다(이근명, 2026).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두 가지 이유에서 재고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비용의 실제 규모다. 세폐가 위신의 차원에서 굴욕이었던 것은 맞지만, 그 경제적 규모는 북송 중기의 세입 규모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은 10만 냥과 비단 20만 필은 당시 국가 세입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

7) 조공 체제가 정복과 지배가 아니라 의례적, 문화적 위계를 통한 평화 유지 기제였음을 밝힌 연구로는 남궁곤(2003), 이삼성(2009), 김영민(2021)이 있다.

고, 하북 전선에서 대규모 야전군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던 군사비의 일부에 불과했다. 더욱이 맹약 이후 국경에 개설된 각장 무역에서 송이 거둔 흑자는 세폐 지출을 상회한 것으로 추정한다(윤영인, 2013; 이석현, 2009). 즉 전연의 맹약은 감당할 수 없는 조공이 아니라, 전쟁 비용 대비 저렴한 안보 조달 방식이었다. 둘째는 그 선택의 정치적 논리다. 송의 사대부들에게 유목 제국과의 총력전은 대규모 징병과 증세로 농업 기반 경제를 파탄 내고, 무엇보다 전쟁 수행 과정에서 군벌의 정치적 부상을 초래하여 자신들이 구축한 문민 지배 질서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였다. 송은 군사적으로 무능한 국가가 아니라 화약 무기를 처음으로 전장에 도입한 군사혁신의 선구자였으며, 전쟁의 정치적 비용을 체제의 관점에서 계산하고 무력 사용을 제한한 국가였다(Andrade, 2016; Lorge, 2005). 요컨대 전연의 맹약이 보여주는 것은 무력을 사용할 능력의 부재라기보다는, 무력 사용이 초래할 국내 정치적 결과에 대한 체제 차원의 경계였다.

이러한 체제 전환의 성격은 11세기 후반 왕안석의 신법(新法)을 둘러싼 대논쟁에서도 확인된다. 신종(神宗, 재위 1067~1085)의 지지 아래 국가 재정 확충과 부국강병을 추구한 왕안석의 개혁은 구법파 사대부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결국 좌초했다. 구법파는 신법이 국가의 이익 추구를 노골화하여 백성을 착취하고, 무엇보다 부국강병의 논리가 왕도의 근본인 덕치를 훼손한다고 공격했다. 부국강병의 논리 그 자체가 유교적 정당성의 법정에 서야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송대에 수립된 동아시아 정치 문화의 규범 구조를 잘 보여준다. 같은 시기 서유럽에서 군사력 증강과 지리적 팽창이 어떤 규범적 수준에서도 의구심을 받지 않는 통치자들의 자명한 목표였던 것과 대비된다. 나아가 신법 논쟁의 좌절을 지켜본 도학자들이 제도 개혁보다 인심(人心)의 교화를 근본 처방으로 삼는 방향으로 나아갔다는 볼(Bol, 2008)의 분석은 성리학의 형이상학적 전환이 단순한 사변이 아니라 현실 정치의 경험 속에서 벼려진 것이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역사가 알려주듯이, 이 선택에 대가가 없지는 않았다. 1125년 요를 멸망시킨 여진의 금(金)이 남하하여 1127년 개봉을 함락하고 휘종, 흠종 두 황제를 포로로 잡아간 정강의 변은 문치 체제의 지정학적 취약성을 극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그러나 이 파국 이후의 경로가 오히려 체제의 성격을 더 분명하게 증명한다. 강남으로 남하한 남송은 임안(항주)을 중심으로 체제를 재건하여 다시 150년을 존속했고, 유라시아 전체를 석권한 몽골조차도 금을 멸망(1234)시킨 뒤 남송을 정복하는 데까지 45년이 더 걸렸다. 더 의미심장한 것은 통치 철학의 생명력이다. 왕조는 무너졌으나 송대에 확립된 문치의 통치 문법과 성리학은 중원의 원・명・청과 한반도의 조선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표준 통치 이데올로기로 계승되어 유목 정복자들마저 많은 부분을 동화시켰다.[8)]

8) 한반도는 고려 무신정권(1170~1270)을 경험한 이후 조선 건국(1392)과 함께 문신 관료제로 폭력의 독점과 통제 체계를 확립하고 성리학을 국가 이념으로 채택했다(Duncan, 2000). 일본의 경우에는 과거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문신 관료제를 발전시키지 않았으며, 12세기 이후 무가(武家) 정권이 지배 권력을 장악했다. 그 결과 무예와 가문의 명예가 지배층의 자격을 구성하고 무력의 사적 행사가 신분적 특권으로 승인되는, 서유럽과 유사한 지배구조가 형성되었다. 전국시대의 상시적 내전, 임진왜란의 대외 침공, 그리고 19세기 말 이후의 제국주의적 팽창은 모두 이 구조와 무관해 보이지 않는다. 도쿠가와 일본은 사무라이를 봉록 관료로 전환하고 사적 무력 행사를 금지함으로써 250년의 평화를 산출했으나, 그 전환도 무사 신분과 무의 명예를 해체하지 않은 채 국가 기구 안에 보존하는 방식이었다.

4. 두 경로의 구조적 지속

포메란츠가 주장한 18세기의 물질적 대분기는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11세기 후반 이래 유라시아 양극단에서 다르게 형성된 정치적·사상적 토대 위에서 작동한 것으로 보인다. 두 문명이 폭력을 다루는 방식, 즉 서유럽의 '폭력의 확장적 제도화'와 동아시아의 '폭력의 도덕적 순치'는 국가 역량의 진화 방향을 갈라놓았다.[9] 11~13세기의 구조적 변곡점에서 채택된 제도의 방향성은 19세기 서세동점 시기까지 강한 경로의존성을 창출했다. 서유럽의 팽창적 군사-재정 국가 모델과 동아시아의 내향적 문치주의 모델은 일단 그 궤도에 오르자, 시간이 지날수록 권력과 이익의 '수확 체증'을 낳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후대의 통치 엘리트들이 대안적 경로로 이탈하는 비용을 극대화하는 '잠금 효과'로 이어졌으며, 각 문명의 폭력 운용 체계가 장기 지속될 수 있었던 구조적 동력으로 작용했다. 요컨대 11세기의 제도적 분기가 700년 이상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단선적 인과가 아니라, 구조적인 축적의 매개 과정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서유럽은 교황 혁명이 정비한 법체계로 권력 주체 간 갈등을 조정하면서도, 십자군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 폭력을 전방위로 투사할 수 있는 제도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는 16~18세기의 '군사혁명(Military Revolution)' 및 대항해시대와 결합하여 아메리카 식민지의 수탈과 노예무역을 통한 자본 축적으로 이어졌다. 찰스 틸리(Tilly, 1975, p. 42)의 정식대로 "전쟁이 국가를 만들고 국가가 전쟁을 만드는" 궤도 위에서 파편화된 정치체들의 항구적인 군사 경쟁은 화약 무기를 비롯한 군사 기술의 지속적 혁신과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경제적 팽창을 강제하는 군사-상업적 토너먼트로 작동했다(Hoffman, 2015). 축적된 자본은 다시 폭력의 체계적 강화를 뒷받침하는 자기증식 회로를 형성했으며, 그 결과가 18세기의 서구적 근대 국가, 즉 재정-군사 국가(Brewer, 1989)의 비약적 발전이었다. 다만 군사-재정 국가의 형성에는 국가 간 경쟁의 밀도, 과세 능력, 신용 시장, 도시화, 재산권 구조 등 독립적인 변수들이 함께 작용했다(Tilly, 1992). 본 연구가 제안하는 것은 이러한 물질적 변수들이 결합해 작동할 때 국가의 폭력과 대외 팽창이 지속되도록 허용한 규범적 조건이다.

서유럽에서는 종교개혁, 베스트팔렌 체제, 세속화와 계몽주의를 통과하면서도 십자군적 폭력의 정당화 문법은 일정한 변이를 거치면서 꾸준히 이어졌다. 첫째, 대항해시대의 교황 칙서는 십자군 논리의 직접적 연장이었다. 1455년 <로마누스 폰티펙스 Romanus Pontifex>는 포르투갈 국왕에게 사라센과 이교도의 영토를 정복하고 그 주민을 영구적 예속 상태에 둘 권리를 부여했고, 1493년의 일련의 칙서는 신대륙을 카스티야와 포르투갈에 분할했다. 제임스 멀둔(Muldoon, 1979)에 따르면, 이 칙서들이 원용한 법리는 13세기 십자군 시대에 이교도의 지배권에 관한 교회법 논쟁으로 정립된 교의였다. 정복의 정당성을 사전에 발급하는 이 문서 형식 자체가 1059년 노르만과 맺었던 멜피 협약의 법리적 계승이었다. 둘째, 16~17세기의 세속화는 이 문법을 폐기한 것이 아니라 신학적 외피를 법학적 외피로 교체했다. 프란시스코 데 비토리아(Francisco de Vitoria)는 스페인의 아메리카 정복을 교황의 권위가 아니라 만민법(ius gentium)에 근거하여 재정당화했고, 그 과정에서 통상과 선교의 자유를 방해하는 원주민에

9) 김상준(2021)은 이를 무력을 끝없이 외부로 투사하며 성장한 서구의 '팽창문명'과 폭력을 억제하고 민생과 도덕적 교화로 밀도를 높인 동아시아의 '내장문명(內藏文明)'이라는 거시적 구도로 대비시킨 바 있다.

대한 전쟁은 '정당한 전쟁'이 되었다. 후고 그로티우스는 이를 세속적 국제법의 언어로 체계화했다. 안토니 안기(Anghie, 2005)에 따르면, 근대 국제법은 유럽 국가 간 관계의 산물이 아니라, 비유럽 세계와의 조우에서 정복을 정당화하기 위해 발전한 법리였다. 폭력을 절차와 권한의 문제로 환원하는 서유럽 문법이 여기서 다시 재생산된다. 셋째, 18세기 계몽사상 역시 이 문법을 해체하지 못했다(이기라, 2024). 계몽은 이상적 질서의 청사진을 절대적 진리로 간주함으로써, 십자군이 이교도에게 부여했던 '절대적 적'의 자리에 '몽매'와 '반동'을 앉혔다. 프랑스 혁명기의 방데 학살은 그 논리가 유럽 내부를 향했을 때의 결과이며, 계몽은 폭력을 정당화하는 준거를 신에서 이성과 진보로 교체했을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19세기의 '문명 표준(standard of civilization)' 담론이 이 계보의 종착지였다. 게릿 공(Gong, 1984)에 따르면, 국제사회의 성원 자격을 유럽적 기준에 대한 부합 여부로 판정하는 이 담론은 기준에 미달하는 정치체에 대한 무력 개입과 불평등조약을 합법화했다. 제국주의를 뒷받침한 사회진화론과 '문명화 사명'의 교리는 각각 계몽주의적 기획의 생물학적 버전이자 전 지구적 확장판이었다. 이교도를 절대적 타자로 규정하던 신학적 이분법이 문명과 야만이라는 세속적 이분법으로 변주된 것이다. 요컨대 십자군에서 교황 칙서로, 다시 만민법과 문명 표준으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언어는 신학에서 법학으로, 다시 과학으로 교체되었지만, 정당한 권위가 절차에 따라 승인한 폭력은 대상과 관계 없이 무제한 행사될 수 있다는 구조는 유지되었다.

반면 송과 그것을 계승한 동아시아 문명에서는 앞서 살펴본 다중 견제 장치와 조공·세폐 체계가 각각 내부 무력의 응집과 대외 안보 비용을 관리하는 기제로 정착했고,[10] 국가 역량은 전쟁 준비가 아니라 농업 재생산의 유지, 황정(荒政)과 민생 안정, 관료제의 정밀화에 투여되었다. 송의 문치주의 모델은 13세기 몽골 제국에 의한 단절에도 불구하고 명·청의 통치 체제로 계승되었고, 특히 조선은 과거제, 경연, 대간 등을 통해 문민 통제를 제도적으로 극대화한 성리학 국가를 완성했다(Palais, 1996). 동아시아의 문치주의적 질서는 14세기 이래 핵심부의 유례없는 장기 평화를 가져왔으나, 그 장기 평화가 오히려 서유럽과 같이 국가의 존망을 걸고 군사혁신을 강제하는 제도적 압력을 상쇄하는 결과를 낳았다. 폭력의 통제와 순치는 몽골과 만주족 같은 외부 세력의 폭력적 침탈 앞에서 왕조 단위의 취약성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체제의 소멸이 아니라 오히려 정복자의 체제 동화로 귀결되었다.

물론 동아시아 문명에 팽창적 요소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송은 금과 동맹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옛 영토 회복을 시도했고, 그것이 정강의 변의 직접적 도화선이었다. 명은 1407년부터 20년간 대월을 직접 점령하여 군현으로 편입했고, 영락제는 다섯 차례에 걸쳐 몽골 친정을 감행했다. 조선 역시 4군 6진 개척과 여진 정벌을 통해 북방으로 영역을 확대했다. 무엇보다 청은 17~18세기에 준가르를 정복하고 티베트와 신장을 제국에 편입시켰다. 이른바 신청사(New Qing History)는 청을 중화 왕조의 연속이 아니라 내륙아시아적 성격의 다민족 제국으로 재해석하며, 만주 정체성과 팔기, 군사적 정복이 청 지배의 핵심이었음을 강조한다(Elliott, 2001; Perdue, 2005; Rawski, 1996).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팽창들이 어떤 규범적 논리와 제도적 틀을 통해 수행되었는가이

10) 고려 무신정변(1170)과 조선 건국(1392)이라는 두 사례를 제외하면, 송대 이후 동아시아 핵심부(중국과 한반도)에서 내부 무력에 의한 문신 지배체제의 전복은 예외적인 사건이 되었다.

다. 첫째, 이들 팽창의 대부분은 새로운 영토의 확장이라기보다는 기존 판도의 경계를 안정화하려는 방어적 논리로 수행되었다. 둘째, 명의 대월 점령은 20년 만에 철수로 귀결되었고 그 실패는 조정 내에서 부국강병 노선 전반에 대한 규범적 비판의 근거로 활용되었다. 팽창의 좌절이 곧바로 팽창 논리의 정당성 위기로 전환되는 구조는 서유럽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셋째, 가장 중요하게, 청의 제국적 팽창은 송대 이래 확립된 한족 문치 질서의 규범 외부에 별도의 회로를 통해 수행되었다. 청은 만주·몽골의 유목적 전사 에토스에 기반한 팔기(八旗) 군사체계와 한족 본토의 주자학적 문신 관료제를 분리하여 운영하는 '이중적 지배체제'를 취했다(Elliott, 2001). 황제는 만주-몽골의 대칸(Khan)으로서 팔기를 이끌고 내륙아시아(준가르, 티베트 등)를 정복했지만, 중원에 대해서는 전통적인 천자(天子)로서 과거제와 문치 질서를 유지·강화했다. 즉, 청의 외부 팽창은 문민 통제 체계의 붕괴가 아니라 이원화된 구조로 결합한 것이며, 정복 왕조는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한족의 주자학적 문치 규범을 더 깊이 체화했다. 서유럽에서 정복의 성공이 다음 정복의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축적하는 자기증식 회로를 만든 것과 달리, 동아시아에서 정복은 대체로 일회적 사업으로 종결되고, 그 담당 조직은 다시 문민 관료제 안에 포섭되었다.

두 경로의 차이는 폭력의 유무가 아니라 폭력을 제어하는 규범의 성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서유럽은 폭력을 종교적 승인과 법적 이성(legal rationality)으로 통제했다. 무력 사용은 정당한 권위(교황이나 군주)의 승인과 명분(성전 또는 정당한 전쟁)이 있을 때 합법화되었고, 정교한 절차적 정당성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폭력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 따지기보다는 폭력 행사의 권한을 가진 주체와 형식적 절차에 집중했다. 권한과 형식의 문제로 환원된 폭력은, 그것만 확보되면 무차별적으로 행사되고 무제한으로 확장될 수 있었다. 그 결과, 귀족 계층의 전사적 에토스는 엘리아스가 강조한 17세기 궁정화와 18세기 계몽주의 시대를 통과하면서도 소멸하지 않고 명예 결투, 상비군, 장교단 등의 형태로 지속되었다. 반면에 동아시아는 폭력을 도덕적 윤리의 문제로 다루었다. 성즉리의 규범 아래서 천리를 어기는 물리적 강제는 어떤 절차로도 완전히 정당화될 수 없는 근원적 타락이었고, 지배계급은 무력이 아니라 도덕적 수양과 학문으로 권위를 획득할 수 있었다. 폭력은 명분이나 형식으로 치환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으므로, 그것의 행사는 대부분 정당성의 결핍으로 기록되었다. 김영민(2021)은 이러한 송대 사대부 사회의 특성을 '형이상학 공화국(The Metaphysical Republic)'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했다. 이 체제에서 진정한 귀족성(nobility)은 세습적 혈통이나 무예가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탁월성에서 비롯된다. 누구나 수양을 통해 우주적 이치를 깨닫고 성인이 될 수 있다는 이 근원적인 도덕적 평등성은, 폭력과 무력을 권력의 기반으로 삼는 것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철학적 토대로 기능했다.

이러한 규범 구조의 차이 위에서, 서유럽의 폭력은 절차적 합법성을 근거로 확장될 수 있었던 반면 동아시아의 도덕적 윤리는 폭력의 물리적 기반을 억제함으로써 폭력 수단의 혁신 유인을 축소했다. 다만, 이를 중국의 군사 기술이 정체했다는 것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동아시아에 군사 혁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지속해서 강제하는 제도적 압력이 서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았을 뿐이다(Andrade, 2016). 엘리아스의 문명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한다면, 폭력의 사회적 통제라는 지표에서 먼저 성과를 거둔 것은 동아시아였고, 서유럽의 '문명화 과정'은 폭력의 억제가 아

니라 오히려 폭력의 합리화와 조직화였다는 역설이 도출된다.[11]

5. 결 론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아편전쟁은 대분기 이후 700여 년에 걸쳐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한 두 문명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다. 우리는 이 충돌에서 확인된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기술해야 한다. 1840년대에 확인한 역전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군사 기술의 격차였다. 1인당 소득 격차가 이미 18세기 이전부터 벌어지고 있었다는 계량경제사의 최근 주장(Broadberry, Guan, & Li, 2018)을 인정하더라도, 그 경제적 격차가 동아시아의 종속으로 전환된 것은 어디까지나 함포를 앞세운 군사적 강제를 통해서였다. 행정의 정교함, 민생 안전망, 사회 통합, 그리고 폭력을 다루는 문명적 성숙에서 청과 조선이 열등했다는 근거는 없다. 서구가 스스로 '문명'을 자처하고 동아시아에 '반개(半開)' 또는 '야만'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사후적으로 구성한 담론이었으며(김용구, 1997; Gong, 1984), 아편전쟁 이후의 불평등조약 체제는 군사적 우위를 경제적·사회문화적 우위로 확장하기 위한 과정이었다. 포메란츠가 지목한 석탄과 식민지라는 근접 요인들 역시 이 구조 위에서 작동했다. 아메리카 대륙은 우연히 발견된 것이 아니라 팽창적 열망 속에서 정복된 것이며, 그 정복을 수행하고 정당화한 의지와 시스템은 11세기부터 초석을 다진 폭력의 확장적 제도화의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포메란츠를 위시한 캘리포니아 학파의 경제·생태 중심의 18세기 대분기론을 비판적으로 확장하여, 유라시아의 두 거대 문명이 구조적으로 엇갈리게 된 근원적 토대를 '폭력의 문명화 방식'에 착안하여 재구성했다. 9~10세기 유라시아의 양극단은 제국 해체 이후의 무인 지배라는 유사한 상황에 직면했으나, 이에 대해 상반된 규범적 해답을 도출했다. 서유럽이 전사 계층의 폭력을 신성한 대의와 법적 절차로 합리화하는 '확장적 제도화'의 길로 나아갔다면, 동아시아의 송 제국은 군사 권력을 억제하고 문신 관료제를 확립한 뒤 이를 도학의 윤리로 정당화함으로써 폭력을 통제 아래 봉인하는 '내향적 순치'를 채택했다. 다만 11~13세기의 제도적, 규범적 분기와 18~19세기의 결과 사이를 잇는 중간 메커니즘은 개괄적으로만 제시된 한계가 있다. 십자군의 경험이 군사혁명으로, 교황 칙서의 법리가 대항해시대 정복의 명분으로 이어지는 각 단계는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검증을 요한다. 또한 비교의 단위를 문명 수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각 지역 내부의 편차, 특히 서유럽 내부의 국가별 차이와 동아시아 내부의 일본·베트남 사례를 다루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 비교의 층위를 정치체 단위로 낮추어, 유사한 지정학적 조건에 놓인 정치체들이 폭력을 정당화하는 규범적 문법에서 어떻게 갈렸는지를

11) 이러한 경로 차이는 전쟁 빈도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된다. 잭 레비(Levy, 1983)의 강대국 전쟁 자료와 피터 브레케(Brecke, 1999)의 지역별 분쟁 목록을 역내 전쟁과 역외 원정을 모두 포함하는 동일 기준으로 1500~1799년에 대해 산정하면, 서유럽 주요국이 전쟁 상태에 있었던 해의 비율은 대체로 절반을 넘고 스페인의 경우 8할에 육박하는 반면, 동아시아 주요국(중국, 조선, 베트남, 일본)은 그 절반 이하에 머문다. 임진왜란, 명·청 교체기의 정복전, 삼번의 난, 준가르 원정, 대월의 남진을 모두 포함하더라도 격차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다만 전쟁 빈도는 지리적 조건, 국경 구조, 국가 규모, 주변 세력의 성격 등 다양한 변수가 개입하므로, 이 자료는 본 연구의 명제를 입증하는 증거라기보다는 그것과 정합적인 방증으로 간주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11세기 후반 “폭력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근본적 질문에 대한 엇갈린 대응은 이후 700여 년간 동서 문명의 진화 경로를 조건 지은 하나의 장기적 분기점이었다. 서유럽의 ‘제도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의 우위’와 동아시아 대륙 핵심부의 ‘도덕적 권위에 종속된 문(文)의 우위’는 각각 대외적 팽창과 대내적 질서의 정교화라는 서로 다른 문명화 경로를 낳았다. 항구적 군사 경쟁의 압력 아래 폭력 수단의 혁신을 집중적으로 축적한 서유럽이 상대적 평화 속에서 내적 질서의 정교화에 자원을 투입한 동아시아를 압도하게 된 것은 11세기 이래 누적되어 온 폭력 운용 체계와 국가 역량 진화의 차이 위에서 가능했다. 따라서 이 거대한 역전을 문명의 우열론으로 환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정학적 우연이나 지리적 횡재만으로 설명하려는 관점 역시 제도의 기저에 작동하는 규범적 역동성을 간과한다는 점에서 여전히 서구중심주의적이다.

참 고 문 헌

김두진 · 이내영 (2012). 서구와 동아시아의 근대화 비교 연구: 유럽중심주의 사관과 ‘대분기(Great Divergence)’ 논쟁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55(3), 39-73.

김상준 (2021). <붕새의 날개 문명의 진로: 팽창문명에서 내장문명으로>. 파주: 아카넷.

김영민 (2021). <중국 정치사상사>. 서울: 사회평론아카데미.

김용구 (1997).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동양 규범체제와 서양 공법체제>. 서울: 나남.

남궁곤 (2003). 동아시아 전통적 국제질서의 구성주의적 이해. <국제정치논총>, 43(4), 7-31.

신채식 (2008). <송대관료제 연구>. 서울: 한국학술정보.

안종석 (2014). 영국 산업혁명의 원인 논쟁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대분기’의 재고찰: ‘제도 · 문화적 해석’의 한계와 ‘경제적 해석’의 도전. <사회와 역사>, 103, 349-399.

윤영인 (2013). 하-송의 5년전쟁(1039-44)과 11세기 동아시아 세력균형. <만주연구>, 16, 7-28.

이근명 (2026). 한국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의 송대사 서술 오류와 그 변천. <역사문화연구>, 97, 217-242.

이기라 (2024). 근대 정치담론과 계몽사상에 내재한 폭력의 문제. <한국과 국제사회>, 8(4), 5-28.

이기라 (2025). 문명화 과정과 폭력의 근대화: 유럽 귀족 전사 에토스의 근대적 지속. <현상과 인식>, 49(4), 45-72.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2>. 파주: 한길사.

이석현 (2009). ‘전연의 盟’의 성립과 宋人의 認識. <동북아역사논총>, 26, 165-203.

Andrade, T. (2016). *The gunpowder age: China, military innovation, and the rise of the West in world histor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nghie, A. (2005). *Imperialism, sovereignty and the making of international law.*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Bartlett, R. (1993). *The making of Europe: Conquest, colonization, and cultural change, 950-1350.*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Berman, H. J. (1983). *Law and revolution: The formation of the Western legal tradi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Bol, P. K. (1992). *"This culture of ours": Intellectual transitions in Tang and Sung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Bol, P. K. (2008). *Neo-Confucianism in history*.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Brecke, P. (1999). Violent conflicts 1400 A.D. to the present in different regions of the world.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Peace Science Society, Ann Arbor*, MI.

Brenner, R., & Isett, C. (2002). England's divergence from China's Yangzi Delta: Property relations, microeconomics, and patterns of development.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1(2), 609-662.

Brewer, J. (1989). *The sinews of power: War, money and the English state, 1688-1783*. London: Unwin Hyman.

Broadberry, S., Guan, H., & Li, D. D. (2018). China, Europe, and the great divergence: A study in historical national accounting, 980-1850. *The Journal of Economic History*, 78(4), 955-1000.

Chaffee, J. W. (1985). *The thorny gates of learning in Sung China: A social history of examination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wdrey, H. E. J. (1970). The Peace and the Truce of God in the eleventh century. *Past and Present*, 46, 42-67.

Cowdrey, H. E. J. (1998). *Pope Gregory VII, 1073-1085*. Oxford: Clarendon Press.

Duby, G. (1977). *The chivalrous society* (C. Postan, Trans.).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uncan, J. B. (2000). *The origins of the Choson dynasty*.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Elias, N. (2000). *The civilizing process: Sociogenetic and psychogenetic investigations* (E. Jephcott, Trans.). Oxford: Blackwell. (Original work published 1939).

Elliott, M. C. (2001). *The Manchu way: The Eight Banners and ethnic ident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Erdmann, C. (1977). *The origin of the idea of crusade* (M. W. Baldwin & W. Goffart, Trans.).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35).

Fairbank, J. K. (1974). Introduction: Varieties of the Chinese military experience. In F. A. Kierman & J. K. Fairbank (Eds.), *Chinese ways in warfar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Gong, G. W. (1984). *The standard of 'civilization' in international society*. Oxford: Clarendon Press.

Hoffman, P. T. (2015). *Why did Europe conquer the world?*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i, V. T. (2005).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Kaeuper, R. W. (1999). *Chivalry and violence in medieval Europ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Kuhn, D. (2009). *The age of Confucian rule: The Song transformation of China*. Cambridge, MA: Belknap

Press.

Landes, D. S. (1998). *The wealth and poverty of nations: Why some are so rich and some so poor*. New York: W. W. Norton.

Levy, J. S. (1983). *War in the modern great power system, 1495-1975*. Lexington, KY: University Press of Kentucky.

Lorge, P. (2005). *War, politics and society in early modern China, 900-1795*. London: Routledge.

Mielants, E. (2007). *The origins of capitalism and the "rise of the West"*. Philadelphia, PA: Temple University Press.

Mitterauer, M. (2010). *Why Europe? The medieval origins of its special path* (G. Chapple, Tra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3).

Moore, R. I. (2000). *The first European revolution, c. 970-1215*. Oxford: Blackwell.

Moore, R. I. (2007). *The formation of a persecuting society: Authority and deviance in Western Europe, 950-1250*. Oxford: Blackwell.

Muldoon, J. (1979). *Popes, lawyers, and infidels: The church and the non-Christian world, 1250-1550*.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North, D. C. (1990). *Institutions, institutional change and economic performance*.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alais, J. B. (1996). *Confucian statecraft and Korean institutions: Yu Hyongwon and the late Choson dynasty*. Seattle, WA: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Perdue, P. C. (2005). *China marches west: The Qing conquest of Central Eurasia*. Cambridge, MA: Belknap Press.

Pomeranz, K. (2000). *The great divergence: China, Europe, and the making of the modern world econom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Rawski, E. S. (1996). Presidential address: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829-850.

Riley-Smith, J. (1986). *The first crusade and the idea of crusading*.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Rosenthal, J.-L., & Wong, R. B. (2011). *Before and beyond divergence: The politics of economic change in China and Europ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Russell, F. H. (1975). *The just war in the Middle Ages*.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Tilly, C. (1975).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European state-making. In C. Tilly (Ed.), *The formation of national states in Western Europe* (pp. 3-83).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Tilly, C. (1992). *Coercion, capital, and European states, AD 990-1992*. Oxford: Blackwell.

Rethinking the Great Divergence: The Control and Institutionalization of Violence in East and West

Gira Lee

Humanitas College, Kyung Hee University

This study reframes Kenneth Pomeranz's "Great Divergence," shifting the timeline and analytical focus from 18th-century economic indicators to a political divergence that unfolded between the late 11th and the 13th centuries and concerne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olence. Western Europe initiated an "expansive institutionalization of violence" through the Norman Conquest, the Papal Revolution, and the First Crusade, whereby martial aggression was justified by canon law and the promise of salvation. Conversely, East Asia's Song Empire pursued "civilian control and inward taming of violence." The Song state subordinated violence to moral ethics by dismantling decentralized military power in favor of a scholar-official bureaucracy recruited through blind competitive examinations. This paradigm was philosophically cemented when the Neo-Confucian Learning of the Way was officially sanctioned as state orthodoxy in the 13th century. These contrasting trajectories conditioned the subsequent evolution of state capacity, and 19th-century Western ascendancy is better understood against this long-term condition than as its direct product.

Keywords: Great Divergence, Civilizing Process, Control of Violence, Crusades, Civilian Supremacy, Neo-Confucianism